

지구온난화에 대한 오해와 몇 가지 사실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는 미명 하에 언제부터인가 각종 환경규제들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적 기조가 확산되어 왔다. 또한 지구온난화 및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 및 문제점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채 오직 일방적 견해만이 존재하는 듯 치부되고 있어 적어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건전한 토론의 기회는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상태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견 및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소개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홍보영상과 소책자를 제작해 지난 1월에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몇몇 언론은 그저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억지 주장이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논란거리로 치부해 지구온난화와 관련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검증의 기회를 유발시키겠다는 원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어구도 있듯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진지한 토론 및 논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 편향적 시각이 가져올 수 있는 국익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이미 수많은 언론 기사를 포함해 블록버스터 영화와 같은 창작물 등 다양한 매개체들을 통해 소개되고 다루어진 바가 있다. 그 결과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북극곰의 멸종, 눈이 녹아 벌거숭이가 된 에베레스트, 급격한 빙하시기의 출현 등 암울한 예측들이 기사화되고 공상 과학물들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어느 샌가 지구온난화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인재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온 국민에게 급속히 확산되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해 의구심을 품거나 회의적 의견을 내놓으면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못하고 과학적 증거들을 부정하는 편향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 가두어져 잘못된 결과를 추종한다고 치부 받게 되었다.

하지만 과연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과학적 의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론만이 존재할까? 우리가 혹시 지구온난화에 대한 편향적 의견에만 노출되어 오히려 편견적 사고가 일반화된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이 당돌하게 느껴지며, 왜 이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포함해 많은 과학자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분들도, 그리고 혹시 불순한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지구온난화에 반하는 과학적 증거들도 속속히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인류가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며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가 이상적 기후변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일 존재한다면 인간의 활동이 그 원인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도입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이 과연 효과적 방안이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회의론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지구온난화는 기정사실화되어 국민들에게 확산되어졌다.

세 가지 쟁점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를 이상적 아니면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배후에는 20세기 후반 지구의 기온상승이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현상이라는 과학적 논거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소위 하키스틱이론으로 불리는 이 과학적 논거를 가능케 한 기온의 측정방식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상반된 증거의 제시를 시발로 이에 대한 과학적 논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¹⁾ 또한 수정된 방식으로 지구 기온을 재측정한 결과 중세 시대가 20세기 후반보다 더 기온이 높았다는 결론이 제시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또 다른 쟁점은 20세기 후반의 기온상승이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현상이냐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지구온난화 원인으로 인간의 경제적 활동이 지목받은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 탄소배출량이 급증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증가와 기온상승간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온의 상승으로 바다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태양흑점의 활성화와 해수흐름의 변화에 기인하는 지극히 자연적 주기현상의 일부는 아닐까? 등 대체되는 다양한 과학적 논거가 제시되어 왔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지구온난화에 근거한 예측치와 상반된 상승추이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관찰되고 있어 이러한 논란 또한 가중되고 있다.²⁾

마지막 쟁점은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자는 목적하에 도입되거나 도입이 검토되는 각종 규제의 완화효과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효과에 대한 논란이다. 우리나라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의 상호간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절제할 유인 구조를 각 경제주체들에게 부여하는, 지구온난화의 완화를 위해 도입이 고려된 대표적 지구온난화 완화정책이다. 하지만 이론상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또한 제도의 구체화 방식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국 수준에서 도입했을 경우 탄소누수효과로 인해 국제적 공조 없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절감에 별반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³⁾

1) 지구의 기온이 역사적으로 20세기 후반 가장 높았던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키스틱이론은 마이클 만(Michael Mann) 등 세 명의 과학자들이 1998년에 제시하였다.
2) 지구온난화가 1998년 이후 실종되었다는 관측이 보고된 바가 있으며 해수 변화와 같은 자연적 주기현상에 기인한다는 과학적 설명이 제시된 바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실종(Hiatus in Global Warming)은 지난 15년간 약 0.8도의 지구온난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온난화 예측모델들의 평균)과는 달리 불과 0.09도의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그리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 논란은 위에서 거론된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다양한 토론이 많은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 예로 경제신문 중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시론란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꾸준히 실리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다루는 기사를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정책의 최종 판단자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 각종 관련 정책들이 불가피하다는 일방적 정보만이 공급되어온 측면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회의적 의견을 소개하는 홍보영상과 소책자⁴⁾를 제작했던 목적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편향적 정보의 공급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 금년부터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관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접하는 기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건설적·사회적 토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호도하며 산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대착오적 괴변이자 이미 과학 및 정치계에서 논쟁이 끝난 사안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구온난화에 반하는 자연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관측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속도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릴 뿐 아니라 대다수 지구온난화 예측모델이 허용했던 통계적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책을 뒤받침하고 있는 과학적 예측이 현실화되지 않고 수정되어야 한다면 그 정책 또한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며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지구온난화 관련 정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정책의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비관적 의견을 미신적 음모론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관련 쟁점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객관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정보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언론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3) 탄소 누수효과(carbon leakage)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특정국의 탄소감축량이 동일 제도가 부재해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타 경쟁국들의 생산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량 증가로 상쇄되는 효과를 말한다.

4) 조경엽·윤상호, 「지구온난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한국경제연구원, 2015